

4년만에 대통령 참석 '임 행진곡' 제창·기념사 낭독

확 달라지는 5·18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2호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는 지침을 국가보훈처에 내림에 따라 올해 5·18기념식은 이전 기념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종북 프레임을 씌워 합창단만 부르도록 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 참가자 전원이 부르는 '제창' 형식을 취하게 되고, 기념사도 4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낭독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문 대통령이 "다시는 호남을 함들게 하지 않겠다"고 후보 시절 공언한데다, 취임 후 과거이러 불릴 정도로 소탈한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5·18 기념식 참석 차 광주에 온 대통령의 일정을

뮤지컬·민중가요 합창 등 기념공연... 규모 예전보다 커질 듯

보훈처, 청와대와 긴밀 협의... 문 대통령 지역민과 만남 주목

두고서도 다양한 전망이 흘러나온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4일 "이번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형식으로 부르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업무지시에 따라 청와대 측과 긴밀한 협의의 아래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5·18 기념식에서는 9년 만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이 입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지난 1997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는 입을 위한 행진곡을 모든 참석자들

이 제창했지만, 일부 보수 진영의 반발로 2009년부터는 합창단이 부르던 원하는 참석자들만 따라 부르는 합창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수정부는 입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점 등을 거론하며 제창 방식으로 부를 경우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5·18 단체를 포함한 진보 진영은 입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방식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해마다 5·18 기념일이 다가오면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문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입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반 전 처장의 퇴임으로 보훈처는 최완근 차장 주도 아래 5·18 기념식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5·18기념식은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방식이 바뀔 뿐 아니라 규모도 예전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5·18 기념식 초청장을 약 8000명에게 발송했지만, 행사 참석자는 4000명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참석자는 3000명 수준이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5·18 기념식은 개회,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념식에서는 기념공연을 하지 않았지만 보훈처는 올해 기념식에서는 뮤지컬, 합창 등 기념공연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말인 지

구청노조와 대립 남구의원 흥기로 팻말 훼손 물의

광주 한 기초의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팻말을 흥기로 훼손해 논란이다.

지난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에 따르면 남구의회 소속 A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9시께 의회가 입주한 구청 청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흥기로 팻말 2개를 조각했다. 팻말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A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남구 공무원노조가 설치했다.

남구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은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속 상임위원과 마찰을 빚었던 구청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자리에서 "앞으로 구청 공무원들은 사석에서 의원을 뒷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노조는 이를 문제 삼아 "갑질을 참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라"며 A 의원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사과를 요구했다. 양측은 이후 수개월간 대립해왔고 A 의원은 지난 11일 흥기로 팻말을 부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의회 개인사무실로 들어간 A 의원은 "자해하겠다"며 문을 걸어 잠갔고, 오후 4시 30분께 연락을 받고 찾아온 경찰관의 설득으로 소동은 마무리됐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주민과 공직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A 의원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5·18...37년전 오늘 어떤 일이

대학생들 14일 민주대성회... 15일 교수들도 동참

1980년 5월14일은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교문을 넘어 처음으로 도청 앞 광장으로 확산한 날이다. 이날 전남대 학생 7000여명은 전경대의 저지를 뚫고 교문을 돌파한 뒤 오후 3시 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학생들은 휴교령을 거부했으며 교수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학생들은 이어, 휴교령이 내려진다면 1차적으로 다음날 오전 10시 학교 교문 앞에서, 2차적으로 12시 도청 앞 광장에 집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까지만해도 광주시민들은 신군부의 정권 찬탈 움직임을 지켜 보고만 있었다. 다행히 이날 휴교령은 내려지지 않았고 학생들은 이날뿐인 15일에도 가두시위를 이어갔다. 이날은 전남대뿐만 아니라 조선대·광주교대·동신전문대 학생들도 모였다. 이들 4개 대



학 학생 1만6000여명은 이날 오후 도청 앞 광장에서 대형 태극기를 들고 민주와 축진 시위를 벌였다. 전남대·조선대 교수 200여명이 동참했고, 청년·시민들도 도청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13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사드배치 철폐 및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 잇따라 열려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을 앞두고 주말인 13일 광주 금남로에서 5·18 정신계승을 위한 행사가 잇따라 개최됐다.

'광주진보연대'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2017 범국민대회'에 2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민중의례, 대회 환영사, 사드관련 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회 참가자들은 ▲사주동일실현 ▲세월호 진상규명 ▲사드배치 철폐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촛불 항쟁은 위대한 광주 민중항쟁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 명백한 증거"라며 "민주주의가 살아숨쉬는 세상, 민생이 보장되는 세상, 전쟁의 위협이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민중총궐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선포했다.

대회사에서 박석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헬조선의 끝내고 민중총궐기로 촛불항쟁의 승리를 촛불혁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며 "촛불항쟁 승리의 기세를 타고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통찰이었다"며 "민중투쟁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성취될 수 없기에 촛불집회의 도화선을 만들었던 민중

지역민 '임을 행진곡' 제창·국정교과서 폐지 일제히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한 것은 5·18의 가치를 제 자리에 돌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발표명령자와 행거사격 등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대통령의 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과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5월 3단체도 문 대통령 결정을 반기며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 재발 여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임을 위한...' 제창 지시와 '국정교과서 폐기'와 관련,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임을 위한...' 제창 지시와 '국정교과서 폐기'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광복회 광주·전남연합지부도 "다시는 이러한 시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

대선 승복 현수막 훼손 수사

○...광주 도심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홍준표 후보 측이 대선 결과 승복 의사를 담아 내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1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사 맞은편 가로수에 설치해둔 홍준표 후보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찢어져 있는 것을 자유한국당 측 관계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자유한국당 광주시당 측은 "국민의 뜻을 경계해 받아들일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담아 전날 내걸었던 현수막은 중간 부분이 세로로 군데군데 찢어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현수막을 훼손했을 경우 선거사범이 아닌 단순 재물손괴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용의자를 추적 중. /김형호기자 khh@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장성 서산면 순현리 (공장)  대지 1361평 건물 372평 최저가 657,000,000 감정가 938,000,000	동구 대인동 근린주택 (4층건물)  토지 128평 건물 250평 최저가 885,000,000 최고가 885,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토지 1417평 건물 484평 최저가 224,000,000 최고가 321,000,000	화순 도곡면 천암리 (숙박시설)  대지 978평 건물 1294평 최저가 993,000,000 최고가 3,788,000,000
서구 화정동 원릉(화정역인근)  토지 94평 대지 157평 최저가 549,000,000 감정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모퉁이 500평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